

2007. 05. 29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07년 05월 30일(수) 조건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생산부서: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tel. 02-958-4653

KDI 대외협력팀 tel. 02-958-4030 fax. 02-960-0652

‘반기업정서’의 실제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

1. 조사 개요

조사 목적

-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반기업정서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한 후 해소방안을 모색
- 반기업정서와 기업관련 경제의식 간의 관련성 파악

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

구분	조사 대상	표본수	조사방법
○ 일반국민	- 전국(제주도 제외)의 만 19세 이상 성인	1,024	전화조사
○ 경제전문가	- 경제 및 사회 분야 교수 및 연구원	213	e-mail
○ 교 사	- 전국의 중고교 사회과 교사	520	대인면접
○ NGO간부	- 경제관련 NGO의 상근 간부 · 경제 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약 10여개씩	100	대인면접
○ 노조간부	- 양대 노총의 업종별 노련 상근 간부	100	대인면접
○ 공무원	- 경제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150명 - 지자체 경제담당 공무원 150명	300	대인면접
○ 기업인	- 대기업, 중소기업 각 100여개씩	200	대인면접
○ 국회의원	-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	51	대인면접
○ 언론인	- 언론 및 방송사 경제·사회부 기자	103	대인면접

조사기간

- 2005. 7. 18 ~ 8. 22

2. 조사 결과 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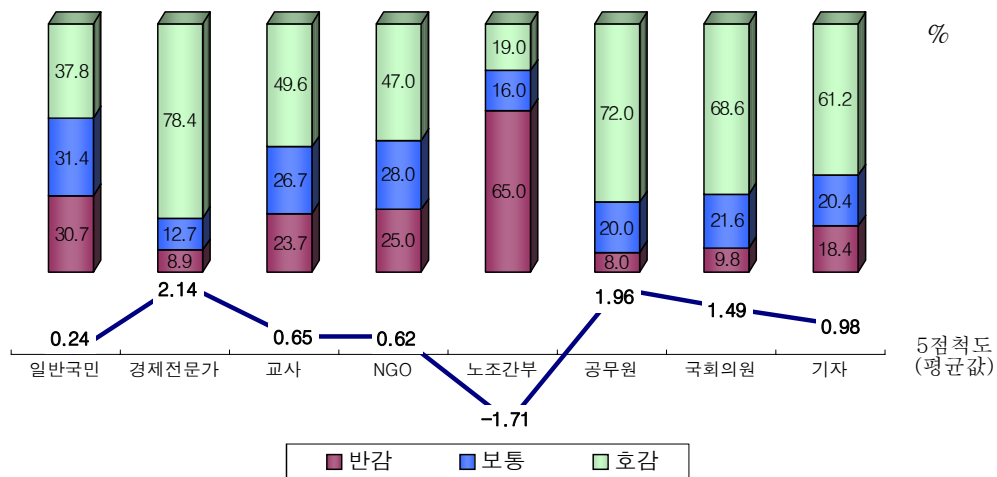
- 노조간부를 제외한 각 조사 집단들은 기업 일반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내
- 반기업정서, 재벌·재벌 총수·공기업 및 부자에 대한 반감으로 규정할 수 있어
- 반기업정서의 대상 행위도 불법·탈법 행위와 부도덕한 경영, 정경유착과 부패 등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
- 반기업정서의 원인, 기업 내부 자체에 있다는 데 기업인들도 공감하고 있어
- 기업에 대한 정서, 재벌·재벌 총수·부자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성 높아
- 기업의 최우선 목표를 ‘이윤창출’ 이라고 생각할수록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
- '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반기업정서 강해
- 기업 부도시 책임은 ‘그 기업의 경영자나 사장’ 에게 가장 크다는 데 공감

3. 조사 결과 요약

□ 기업 일반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감을 나타내

- 기업 일반에 대해 노조간부를 제외하고는 각 조사대상 집단에서 반감보다는 호감을 나타낸 응답이 더 많아
- 특히, 경제전문가, 공무원, 국회의원, 기자 집단에서는 응답자의 60% 이상이 호감을 나타내
 - 반면, 노조간부의 경우 65.0%가 반감을 보이는 등 조사대상 집단들 중 기업과 기업인 및 부자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드러나
- 일반국민의 경우 반감, 보통, 호감의 응답률이 비슷한 편이나, 호감을 나타낸 응답비율이 다소 높아(반감 30.7%, 보통 31.4%, 호감 37.8%, 호감도 평균=0.24)
 - 그러나 30·40대 연령층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반감이 강해

[기업 일반에 대한 호감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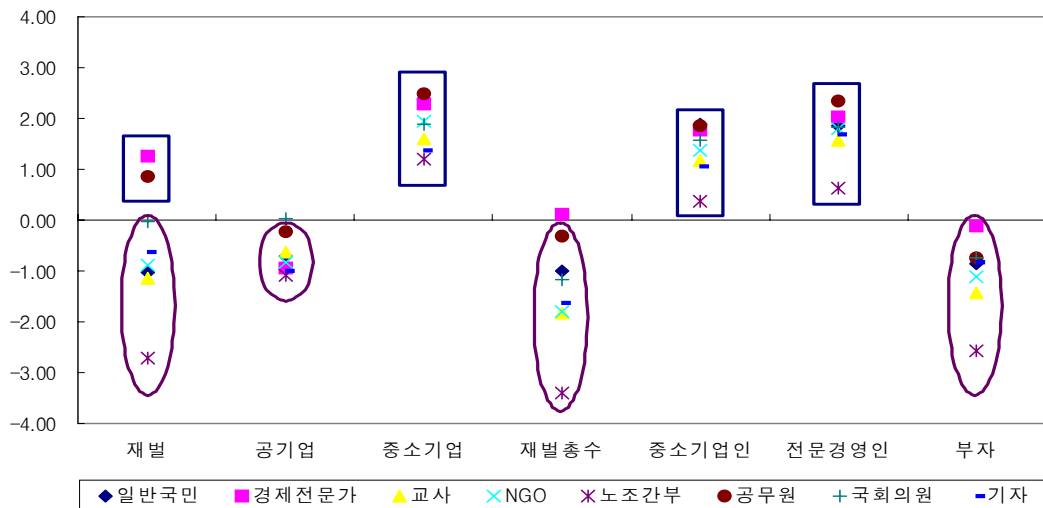


□ 반기업정서, 재벌재벌 총수·공기업 및 부자에 대한 반감으로 규정할 수 있어

- 기업 일반에 대해 호감을 보인 의견이 우세하며, 중소기업·중소기업인·전문경영인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강한 호감을 보여

- 이에 반해, 재벌과 재벌 총수,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감을 나타내는 응답이 많았으며(경제전문가, 공무원 제외), 기업과 기업인의 분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부자에 대해서도 반감을 보이는 응답이 많아
 - 부자에 대한 호감도는 재벌 및 재벌총수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
 - 한편,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반기업정서의 대상으로 ‘재벌’ (91.5%), ‘오너경영인’ (76.0%), ‘부자’ (61.5%), ‘공기업’ (55.0%)의 순으로 나타나
- 그러나, 경제전문가와 공무원들의 경우 재벌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, 재벌 총수에 대해서도 다른 조사대상 집단에 비해 반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
 - 특히 경제전문가의 경우, 재벌 및 재벌 총수에 대해 조사대상 집단 중 가장 호감을 나타낸 반면, 공기업에 대해선 반감을 가장 많이 드러내

[반기업정서 대상에 대한 조사 집단별 호감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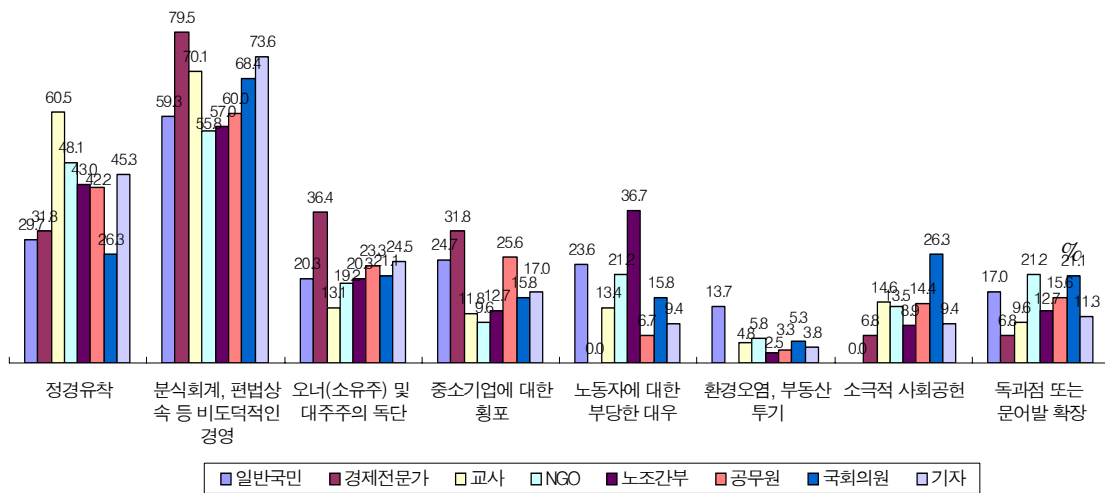


□ 반기업정서의 대상 행위도 불법·탈법 행위와 부도덕한 경영, 정경유착과 부패 등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

- 재벌에 대해 반감을 나타낸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, ‘독과점 또는 문어발 확장’으로 표현한 경제력 집중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‘소극적 사회공헌’ 보다는 ‘분식회계, 편법상속 등 비도덕적인 경영’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아

- 그 다음 이유로는, 경제전문가를 제외하고는 ‘정경유착’ 을 많이 꼽아
- 그러나, 경제전문가의 경우, ‘오너 및 대주주의 독단’ 을 다른 조사대상 집단에 비해 훨씬 많이 지적하고 있어
- 또한 재벌 총수에 반감을 나타낸 경제전문가들도 그 이유로, ‘정경유착, 탈세 등 도덕성 부족’ 다음으로 ‘소수지분으로 기업 전체 지배’ 를 많이 응답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문제에도 초점을 두고 있어

[재벌에 대한 반감 이유]



□ 반기업정서의 원인, 기업 내부 자체에 있다는 데 기업인들도 공감하고 있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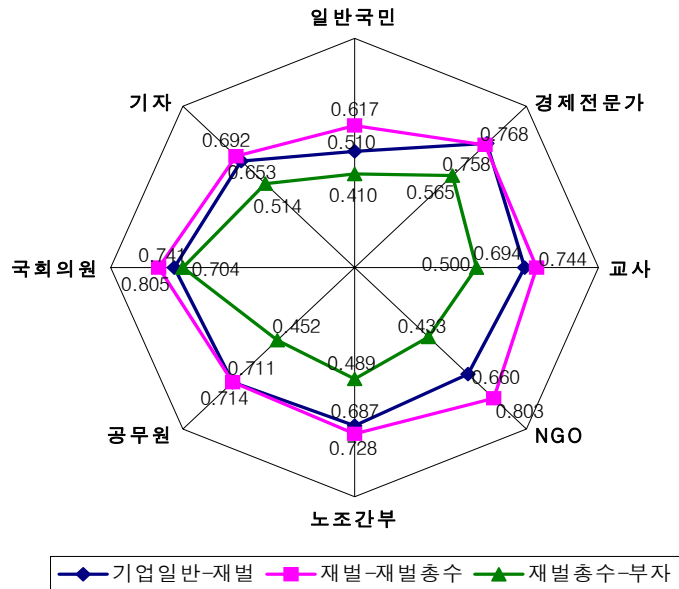
- 모든 조사 대상 집단에서 반기업정서의 원인이 기업 외부보다는 내부(자체)쪽의 원인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
- 특히, 경제전문가 중 거의 모든 응답자들(97.2%)이 반기업정서의 원인은 ‘대부분 기업 자체의 문제이다’ 고 인식하고 있어
- 이와 같은 견해에 기업인들도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바,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(48.5%)가 반기업정서의 원인이 기업 자체에 있다고 응답해

□ 기업에 대한 정서, 재벌·재벌 총수·부자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성 높아

- 기업 일반을 비롯하여 기업과 기업인 분류, 그리고 부자에 대한 각각의 호감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, 기업에 대한 정서는 재벌 및 재벌 총수, 그리고 부자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

- 즉, 재벌 및 재벌총수에 대한 정서가 기업 일반뿐만 아니라 부자에 대한 호감도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어
- 따라서,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‘반기업정서’는 막연하게 기업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, 재벌 및 재벌총수를 대상으로 한 정서가 실체라고 볼 수 있어

[재벌·재벌 총수·부자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성(상관계수)]



□ 기업의 최우선 목표를 ‘이윤창출’ 이라고 생각할수록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

- 기업 활동의 최우선 목적으로, 경제전문가(82.2%), 기자(67.0%), 국회의 원(52.9%)은 ‘이윤창출’ 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, 노조간부(74.0%), NGO 상근간부(53.0%), 공무원(50.0%), 교사들(49.0%)은 ‘이윤의 사회 환원’ 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,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‘근로자의 복지향 상’ (32.5%)이라는 응답이 많아
- 해당 설문은 특정 주제에 대한 견해를 묻기 보다는 기업활동에 대한 이 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, 경제 관련 공무원들과 중고교 사회과 교 사들이 ‘이윤창출’ 보다 ‘이윤의 사회환원’ 을 더 많이 선택했다는 점 은 경제교육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보여져
- 이러한 맥락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, 기업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‘이윤창 출’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다른 항목을 선택한 사람들에 비해 기업 일 반을 비롯하여 재벌 및 재벌총수 등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

- 반면, 기업활동은 ‘근로자의 복지향상’ 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업 일반 및 재벌과 재벌총수 등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해
- 한편 일반국민의 경우 기업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‘이윤창출’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다른 항목을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공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반감을 나타내
- 이는 경제전문가들의 경우 기업 일반 및 재벌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반면, 공기업에 대해서는 반감이 가장 컸다는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
- 즉 기업의 목표가 ‘이윤창출’ 이라고 인식할수록 기업 일반 및 재벌에 대한 호감도는 높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반감이 클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해

□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반기업정서 강해

-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문제에 대해 경제전문가를 제외한 다른 조사대상 집단들에서는 ‘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’ 는 주장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어
- 반면, 경제전문가의 대다수(67.1%)는 ‘사회에 기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’ 는 의견을 나타내
-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문제와 관련한 의견 역시 기업에 대한 호감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, ‘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’ 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‘기업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’ 는 의견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기업 일반을 비롯하여 재벌 및 재벌총수, 부자 등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

□ 기업 부도시 책임은 ‘그 기업의 경영자나 사장’ 에게 가장 크다는 데 공감,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의식과는 상관성 떨어져

- 기업 부도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,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‘그 기업의 경영자나 사장’ 이라는 응답이 대다수

※ 일반국민 73.5%, 경제전문가 95.3%, 교사 89.2%, NGO 91.0%, 노조간부 92.0%, 공무원 84.7%, 국회의원 94.1%, 기자 90.3%)

- 다만 일반국민의 경우 ‘정부’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(15.7%)이 다른 조사대상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
- 경제의식과 관련한 다른 설문들과는 달리 기업 부도시 책임 소재에 대한 의식과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의식과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

4. 시사점

□ 이번 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의식조사’ 결과가 보여주는 특징은, 반기업 정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재벌과 재벌총수들의 올바르지 못한 경영행태에 의해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

- 또한 기업활동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에서 반기업정서 성향이 높아
- 따라서 반기업정서를 불식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,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정도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체계 확립해야

- 반기업정서의 대상 주체가 재벌기업과 재벌총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, 반기업정서의 대상 행위로는 기업의 불법·탈법행위와 부도덕한 경영, 정경유착과 부패 등에 집중되고 있는바, 기업 스스로 結者解之 차원에서 정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

- 이를 위해 과거 잘못된 경영관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백을 할 경우 책임을 묻되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하고,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·탈법적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정도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

※ 참고로, 해외 유력 언론들은 한국의 재벌총수들이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경영비리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경영일선에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, 이를 ‘코리아 디스카운트’의 한 원인이라고 빈번하게 지적

□ 대국민 경제교육을 강화해야

- 기업활동의 최우선 목적을 ‘이윤창출’ 이라고 생각할수록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,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반기업정서가 강하게 나타난 것은 ‘기업의 경영활동 목적’ 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‘경제교육’ 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
 - 이번 조사에서 경제관련 공무원들과 중고교 사회과 교사들이 ‘이윤창출’ 보다 ‘이윤의 사회환원’ 을 더 많이 응답했다는 것은, 기업관련 정책입안 측면이나 미래 경제주역인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적지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
 - 또한 기업의 활동 목적을 ‘이윤의 사회환원’ 이라고 74%가 응답한 노조간부들의 반기업정서 경향이 강한 것도 ‘노사관계’ 를 어렵게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
- 따라서, 교사·공무·노조간부 등에 대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등 경제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, 체계적인 대국민 경제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

□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

- 추세적으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적지 않게 강조되는 상황인 바, 기업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